



— 조합 · 업계소식

-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16품목 선정”
- 2012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안) 안내
- 성주 참외 박스 줄이자 ... 1억 번 농가 확 늘었다
- 총각무 골판지상자 포장사업 '잔결음'
- 국가기술자격 “포장산업기사” 폐지 입장 반대
- 中企중앙회, 이행보증사업 설명회 개최
- 대규모그룹의 MRO사업, 사회적 합의체 구성 출범
- 불공정 하도급거래 집중점검
-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확대해야”
- 중기, 대기업 MRO사에 '최후 통첩' 기존 대기업과 거래 유지하되 추가는 안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16품목 선정”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9월 27일(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 1차 선정으로 16개 품목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세탁비누 품목은 사업이양(사업철수), 골판지상자, 플라스틱금형 등 4개 품목은 진입자제, 고추장, 간장,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 11개 품목은 확장자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5월 27일 신청접수된 234개 품목 중에서 1차 검토품목 4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8차 동반성장위원회(9.16 개최)에서 조건부 승인 및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19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협의체 운영을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1차검토 45개 품목 중에서 나머지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10월 중에 추가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행여부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1차 선정품목

- 사업이양(1개품목) : 세탁비누(사업철수)
- 진입자제(4개품목) : 골판지상자(확장자제 포함), 플라스틱 금형(확장자제 포함), 프레스 금형(확장자제 포함), 자동차재제조부품
- 확장자제(11개품목) : 순대(사업축소), 청국장, 고추장(사업축소), 간장(사업축소), 된장(사업축소), 막걸리(내수진입자제), 떡, 기타인쇄물, 재생타이어(사업축소), 절연전선, 아스콘

2012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안) 안내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 4월말 지식경제부로 “2012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신청하였다. 이번 신청 품목은 골판지포장업계에서 사용되는 주요설비로써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생산은 가능하나 성능이 수입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품목으로 골판지제조기를 포함한 총 9가지 품목이었다.

이에 지난 2011. 9. 21(수) 지식경제부는 골판지포장조합이 제출한 품목에 대해 관련 부처와 검토를 통해 “2012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 고시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품목은 골판지포장조합이 제출한 기품목 중 총 6가지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2가지(① 전분자동제어장치 ② 오토스프라이서) 품목은 신규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나, 3가지(① 골판지제조기 ② 플렉소폴더스티처 또는 플렉소폴더글루어 ③ 플렉소다이커터) 품목은 제외되었다.

이에 골판지포장조합은 즉각 지식경제부로 제외된 품목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회신 받았으며, 앞으로 관세감면율도 2011년도 현재 기본관세 8%중 중소기업은 30%(대기업 10%)를 받고 있지만, 2012년도에는 20%(대기업 0%)로 축소된다는 방침을 전해왔다.

따라서 골판지포장기업에서는 2012년에 기계 및 설비의 도입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2012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안)”을 숙지하여 제외된 품목이 포함이 되었다면 2011. 12. 31까지 도입을 통해 관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1~2012년 관세감면 품목

구분	품목	2011년 대상	2012년 대상(안)
1	골판지제조기	○	×
2	골판지웹조절장치	○	○
3	결속기	○	○
4	슬리터	○	○
5	오토스프라이서	×	○
6	적재기	○	○
7	전분자동제어장치	×	○
8	플렉소폴더글루어 또는 스티처	○	×
9	플렉소다이커터	○	×

관세감면율(기본관세 8%)

- 2010년(現) : 중소기업 30%, 대기업 10%
- 2012년(안) : 중소기업 20%, 대기업 0%

성주 참외 박스 줄이자... 1억 번 농가 확 늘었다



경북 성주군은 농업 소득의 70% 이상을 참외에서 올리고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참외의 고장’이다. 참외 농사를 짓는 곳이 5,000여 가구에 달한다. 노시영(51·선남면 도흥리)씨도 참외 농사를 짓는다. 2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그의 꿈은 연소득 1억원을 올리는 것이다. 이 꿈이 올해 실현됐다. 그는 올해 참외 농사로 1억 2,000여만원을 벌었다. 그가 재배 면적을 늘려 소득을 늘린 건 아니다. 참외 값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것도 아니다. 노씨뿐만이 아니다. 성주군의 287농가가 올해 새로 참외 1억원 소득 대열에 합류해 전체 750농가가 소득 1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이들 농가가 1억원 꿈을 이룬 배경에는 작은 아이디어의 힘이 있다. 바로 참외 상자의 변신이다. 성주군은 을 들어 기존 15kg짜리 참외 상자를 10kg들이로 바꾸었다. 15kg들이 상자의 너비는 그대로 두고 높이만 줄였다.

노인 일꾼이 대부분인 농촌에서 15kg들이 상자는 무거웠다. 노인들이 참외를 포장하고, 옮기는 일을 할 때 효율이 떨어졌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건비도 더 들어갔다. 소비자들도 15kg 상자에는

쉽게 손이 가지 않았다. 성주군은 상자 무게를 줄이기로 하고 농사가 끝난 지난해 10월 1,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농민 80%가 참외 상자 크기를 10kg으로 줄이자는 데 찬성했다.

상자를 바꾼 뒤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개당 공판 시세 기준으로 10kg짜리가 더 비싸진 것이다. 성주군 최창진(49) 참외담당은 “15kg 한 상자에 3만 2,000원 정도를 받았는데 10kg 상자로 바뀐 뒤에도 값은 3만원 가까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무게가 3분의 2로 줄면 가격도 2만원 정도로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격이 3만원으로 형성되면서 상자당 1만원 정도 더 비싸졌다. 참외는 15kg 상자에 평균 45~50개, 10kg에는 30~40개가 들어간다.

상자 크기를 바꾸니 참외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노씨는 “10kg 상자에는 참외가 3단에서 2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에 부실한 참외를 집어넣는 이른바 ‘속박이’가 사라져 품질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다. 소비자들은 이런 참외를 환영했다. 품질이 좋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져 상자를 쉽게 들 수 있게 되자 성주 참외를 더 찾았다. 성주군이 올해 10kg 참외 상자로 히트를 치자 고령·칠곡·안동 등 인근 지역도 이를 따라갔다.

출처 : 중앙일보 사회면 (2011. 10. 13)

총각무 골판지상자 포장사업 '잔걱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무안서 시연회 갖고 본격 추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총각무 포장화 시범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공사는 지난 1~2일 전남 무안의 총각무 재배단지에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협회 및 총각무 출하주 관계자들을 초청, 총각무 포장화 시범사업을 선보였다.

2일 오전 7시30분 첫 작업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오후 2시 세차례에 걸쳐 포장화 시범

사업이 진행됐다. 포장화는 기존의 골판지상자(5kg 기준)에 담은 것과 골판지상자 안에 시늬 방지를 위한 기능성 비닐을 깔고 총각무를 포장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 이뤄졌다.

시범사업 결과 오전에 수확 작업한 총각무의 경우 골판지 상자에 담긴 것과 기능성 비닐에 담긴 것 사이에서는 물뿌림 작업 없이도 잎시늬의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사측은 밝혔다.

특히 날이 더운 오후 작업시 수반되는 잎시늬 방지 효과를 위해 오후 작업 1시간 전에 차광막을 덮는 방식도 도입됐다. 차광막을 이용한 작업에서는 잎시늬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어 물을 뿌리지 않고 도매시장 출하가 가능한 것으로 대다수 참가자들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광막 활용시 예상되는 인건비와 노동력 투입시간 등을 고려할 때 차광막 도입은 앞으로 더 검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날 포장화 작업을 한 총각무 300상자는 저녁 8시께 가락시장에 출하됐다.

공사는 총각무 포장화로 인해 늘어나는 생산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5kg 상자 기준 550원가량

의 골판지상자를 골판지협회와 협의하는 한편 대량 구매 등을 통해 400원대까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교훈 삼아 총각무 중도매인 및 출하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총각무 포장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각무의 포장화사업이 정착되면 상자 포장재비 부담과 적재 비효율이 일부 있더라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산(불량품 비율을 감안해 덩으로 주는 것)·청소비·선별비 등이 없어지게 돼 그만큼 농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공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 2011. 9. 7

국가기술자격 “포장산업기사” 폐지 입장 반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현장성 제고를 위한 자격종목에 대한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포장산업기사”에 대한 폐지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상기 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포장산업기사는 포장기사와의 필기시험과목 기준으로 물류관리 1과목의 차이와 약간의 난이도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포장기사 존치 포장산업기사 폐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3년 포장기사 2급으로 신설되어 1998년 포장산업기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재 포장관련학과로는 4년제 연세대 패키징학과가 유일하며, 2년제로는 경북과학대학, 신성대학, 용인송담대학 등이 있었으나, 최근 학과 통합합 등으로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포장관련 2년제 대학은 전무한 실정임을 사유로 들고 있으며, 아울러 (사)한국포장협회에서 통신교육 후 자체평가를 통하여 발급하는 유사한 포장기술관리사가 있음을 이유로 포장산업기사폐지 포장기사 및 포장기술사 등의 응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회의에서 제기된 입장은 포장기사 및 포장산업기사의 출제난이도가 매우 높아 합격률이 낮고, 과거부터 축적된 문제은행식 출제로 현재의 기술과 상이한 문제가 많아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문제은행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학생들의 중간고사 등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응시일정을 정한다면 관심 갖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합격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기 확보된 제도를 개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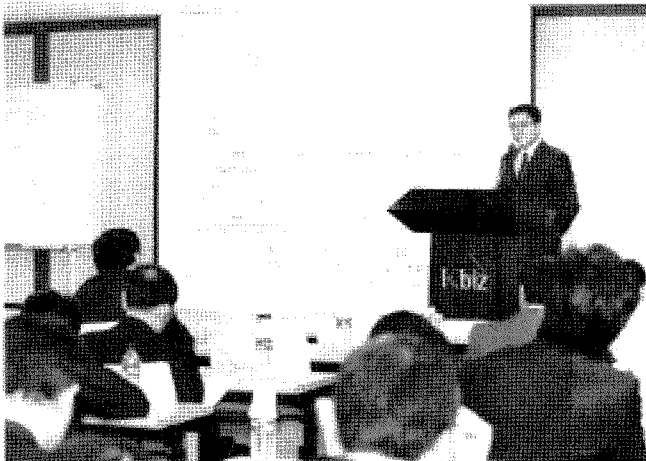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용인송담대 신준섭 교수는 우리학교는 포장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 응시학생의 대

부분이 우리 학생임에도 이 연구과정에서 어떠한 의견 교환도 없었다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는 연구자 개인의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며, 특히 국가자격을 민간관리사 제도와 동일한 위치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임을 지적하였다.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전제로 산업계에서 포장산업기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채용과정에서 가점 적용 제도가 정착된다면, 보다 양질의 포장전문인을 양성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산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포장관련 단체와 포장관련 매체 등이 중심이 되어 현상을 알리고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2011. 9. 9(금) 개최한 포장전문가회의에서는 공단 관계자와 포장산업 김청 회장, 포장기계협회 김형순 부회장, 산기평 포장지원센터 이준영 박사, 오리온 천동영 팀장, 용인송담대 신준섭 교수와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가 참석하였다.

중소중앙회, 이행보증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년 3월 도입될 중소기업 이행보증 공제 사업에 대한 협동조합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지난 6일 여의도 소재 중앙회에서 협동조합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행보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종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이행보증공제는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완화는 물론

각 협동조합이 대리점으로 참여해 조합원 업체들을 가입유치하고 위탁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함께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흥광원 한국금속조합 전무는 “그동안 이행보증사업이 독과점형태로 운영돼 사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컸다”며 “내년부터 중앙회가 이 사업에 진출하게 돼 중소기업들이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중소기업 이행보증사업’은 지난 6월 30일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돼 내년 3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을 본격 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달계약과 관련된 입찰, 계약이행, 선금금 및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서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골판지상자의 경우도 조달청 공공구매 물량과 농수축협 등의 입찰계약과정에서 필요한 보증서발급 비용 저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골판지포장조합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대규모그룹의 MRO사업, 사회적 합의체 구성 출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성위) MRO대기업자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동성위는 실무위원회(위원장 이장우 경북대 교수)를 이끌어 갈 위원을 구성하였는데, 중소기업계에서는 골판지포장조합의 김진무 전무이사, 산업융재협회 유재근 회장, 베어링협회 박일근 회장, 문구도매조합 김경래 이사장, 대기업계 측에서는 씨브윈 허태열 상무이사, IMK윤태산 상무이사, KeP 이상엽 본부장, 엔투비 조평래 이사, 공익위원으로는 이장우 위원장을 비롯하여 현수 서울대 교수,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 이병희 한양대 교수등이 위촉되었다. 지난 8월 26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운용 취지와 MRO사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이 필요하고 각자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이어 제 2차 위원회는 9월 16일 개최하였는데 현재 MRO의 사회적 이슈를 확인하고 사회적합의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날 대기업 측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합의한바 있는 사업조정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하였고, 중소기업계에서는 당시의 사업조정 합의는 베어링과 산업용구업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3차 회의 개최 전에 대기업계와 중소기업계 대표를 선정해 실무적 절충기로 하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진무



전무이사, 대기업계에서는 이상엽 본부장과 공익 위원인 원종문 교수의 중재 하에 지난 9월 30일 회의를 가졌다. 김진무 전무이사는 중소기업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과 협의하여 중소기업계의 안을 가지고 품목별로 정해 MRO 사업 품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였고, 이상엽 본부장은 MRO 대기업자의 중소기업계의 사업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회의를 마쳤다.

제 3차 회의는 10월 11일 있었는데 실무간사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자는 당초의 일정대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진무전무이사는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된 것인 만큼 대기업들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한데 한치의 양보 이사도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중소기업계 최종안으로 공정법상 대기업 계열사와 현재 일반대기업(중견기업)중 기 거래하고 있는 기업까지만 영업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대기업 신규 및 중소기업계와 공공부문 등은 영업하지 않는 것이라면 품목별 영업제한 주장을 철회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써브원과 KeP측은 사업을 축소하라는 안이라며 반대하였고, 이상우위원장은 “합의란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계의 최종안은 상당한 양보”라는 평가를 내놓았고, “대기업들은 차기 회의에서 중소기업계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혀 달라”는 요청과 함께 회의를 마쳤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집중점검

내실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부당한 단가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행위 점검에 나선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 1년을 맞아 “앞으로 부당한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하면서 동반성장 협약 확산,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한 단가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행위를 3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정위는 이달 중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 실태조사에 나서 금년도 서면실태조사에서 감액사실이 지적되거나 제보 등이 있는 3~4개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감액사유 및 규모, 감액시 서면교부 이행상황 등

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 계약시 상습 · 고의적 서면미교부 업체를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고 4분기에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바람직한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 · 보급해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하순부터는 기술탈취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프트웨어 분야 등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요구서 서면교부 이행실태 등을 점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효과가 2차 협력사 이하에게도 전달되도록 협의가 있는 2차 협력사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기존 법에서 매출액 등 2배 기준이 폐지돼 새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거래를 집중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와 관련 공정위는 이달 중에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업체별로 대표적 상품군의 중소납품업체를 선정해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부담 내역을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확대해야”

중소기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하반기 도입쿼터를 추가해줄 것과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6일 중앙회에서 이체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 박덕흠 전문건설협회장, 강석대 설비건설협회장, 남상만 음식업중앙회장, 김용만 프랜차이즈협회장, 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해수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은 내국인의 취업기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생산활동을 지탱하고 있으나 그나마 도입쿼터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하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필요인원인 3만4,000명을 추가 배정해 중소제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부담금제 도입과 관련,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숙식비까

지 무료로 제공하는데 고용부담금제까지 도입되면 영세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외국인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재익 한국진동전압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고 숙식비까지 감안하면 내국인 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높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액에 숙식비 등 현물급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외에도 △비제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산재은폐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포상확대 △외국인력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와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는 국내외 경제및 고용사정 등을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기, 대기업 MRO사에 '최후 통첩' 기존 대기업과 거래 유지하되 추가는 안돼"

“동반성장위서 조정안 통보”

“대기업 MRO社 강력 반발 속 최종 가이드라인 27일 결정”

• 대 · 중기 MRO 협상일지 •

2010. 4	중소업계 4개 대기업 MRO 상대 사업조정 신청
2010.5~2011.5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8차례 자율조정 협의
2011.6	서브윈 등 4개 대기업 MRO와 베어링 · 산업용재협회간 사업조정 합의
2011.8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MRO 실무위원회 발족
2011.8~10	3차례 실무대책 회의
2011.10.27	4차 실무대책 회의

중소업체가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실무위원회에서 대기업MRO사들에게 ‘중소기업과 공공부문, 구매대행을 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하지 말라’ 는 내용의 사업조정안을

최종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기업측은 1차 협력사를 포함시켰던 지난번 중소기업청 조정안 보다 훨씬 강화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중기측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19개월간 끌어왔던 MRO가이드라인의 타결여부는 오는 27일 마지막 협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9개월만에 MRO 결판날까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 함께 중소기업의 최대 현안인 MRO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지난해 4월. 산업용재와 베어링 중소기업계가 서브윈(LG), 아이마켓코리아(삼성), 엔투비(포스코), 코리아플랫폼(KeP, 코오롱) 등 대기업 계열 4개 MRO를 상대로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부터다.

이후 우리사회에 동반성장이라는 화두가 대두되면서 대기업의 전향적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6월초 양측은 '신규 고객사 확장은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와 1차 협력사에 한정한다'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8월말 동반위 산하에 MRO실무위원회가 꾸러졌고 사업조정안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기업측에선 4개사 그대로였고, 중소기업계는 기존 한국산업용 재협회와 한국베어링관매협회외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이 추가됐다. 양측은 이후 3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중기측은 3차 회의에서 마지막 사업 조정 가이드라인을 대기업에 최종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4차 회의는 27일 동반위서 열린다.

◇중소업계 '최후통첩' 선언=중소업체가 중기청 사업조정안에 반발한 근본적인 이유는 '1차 협력사' 조항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1차 협력사"라며 "결국 대기업 MRO사들이 기존 중소기업과의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결국 동반위 산하 MRO실무위원회 3차 회의에서 중소기업계 담당자들은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우선 대기업 MRO 계열사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한 56개 대기업 계열사와의 거래는 인정했다. 하지만 기존에 구대대행을 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의 신규 거래는 제한했다. 또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의 거래도 원천봉쇄했다.

중소업체측은 "쉽게 말해 기존 대기업과의 거래는 계속하되 추가로 벌이지 말라는 얘기"라며 "원래 품목

별로 영업제한 지침도 마련했지만 큰 틀에서 조정안을 제시한 만큼 품목별 가이드라인은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기업 반발 심해 타결 불투명=중소업계의 통보에 대기업들은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기업 MRO사들은 “아예 사업을 확장하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냐”면서 “협상이 절충 과정을 거쳐야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한다고 될 일이냐”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매출이 가장 큰 서브원과 KeP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측은 “대·중기 양극화가 커 줄이자는 마당에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걸 움켜쥐고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협상이냐”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중기 기본 합의안을 파기선언하고 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대기업 실무진의 반대가 너무 심해 조정안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반위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상황과 판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처] 서울경제 (경제) 2011. 10. 25

